

# 시장경제와 한국의 농업(上)



성진근

충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 I. IMF경제위기의 교훈

IMF체제를 불러들인 환란(換亂)쇼크가 우리사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강력한 규제와 정부개입에 의존해서 운영되어온 고도성장시대 이래의 고비용·저효율체제의 청산이다.

이를 위해서 보다 강한 시장경제원리가 강조되는 가운데 정부의 시장개입은 축소되고 각 경제주체들의 시장경쟁에 따른 책임이 보다 강조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시절의 한국경제가 이룩해온 성장의 탑은 한마디로 모래성이다. 30대 재벌기업의 평균부채비율은 450%였다. 대표적인 부실기업인 한보의 그것은 심지어 5200%에 달했다.

과다한 부채 때문에 기업의 수익률은 금리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고 만기가 돌아온 빚을 갚을 용도로의 또 다른 새 빚을 얻기 위하여 기업들은 정치권과 결탁하여 갖은 비리를 저질러왔다.

'검은 돈'이 떡 값이란 명목으로 뭉치 돈으로 굴러다니면서 부동산 투기열풍, 사치품 수입과 과소

비 열풍을 일으켰다.

마침내 모래성은 부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무너졌고 한국경제는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다. 높은 이자부담과 생산성향상 속도를 앞질러서 상승된 높은 임금 때문에 한국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졌고 무역적자는 쌓여갔다.

위기를 느낀 외국은행을 비롯한 외국자본은 투자회수와 함께 신규투자를 억제했고 나라의 외환보유고는 바닥이 났다.

국가부도 위기로 내몰렸던 심각한 상태에서 IMF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구조개선안을 제시하게 된다.

기업의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줄이라는 것,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소위 BIS)을 8%이상으로 올리라는 것, 금융환경을 투명히 하고 환율과 금리를 높여서 외자유치를 촉진하라는 것 등이 그것이었다.

당연한 요구였다. 이자가 수익률보다 높은 기업이 어떻게 국제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

겠는가? '망할 수밖에 없는 기업은 망하게 하는' 구조조정은 진작 시행되었어야 할 일이었다.

은행의 부실채권은 IMF당시 모두 120조원에 달했다. 120조원이란 돈은 1,200만 가구가 가구당 1,000만원씩을 저축해야 만들어질 수 있는 큰 돈이다. 이 돈을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빌려주고 6개월 이상 이자를 못받고 있는 돈이 부실채권이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이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수많은 부실기업들이 부도처리되어 시장에서 퇴출당하였다.

은행도, 재벌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용케 살아남은 기업들도 자산을 정리하고 보유주식을 국내외로 팔아서라도 부채비율을 권장수준 이하로 관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을 비롯한 국내 우수기업들이 외국자본의 경영지배체제로 변했으며 재벌기업간의 빅딜을 비롯한 구조조정이 오늘도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IMF위기가 우리에게 제공한 두 가지의 교훈이 있다.

그 하나는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잘못된 국가경영의 책임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 II. 시장경제 원리, 왜 강조되고 있는가?

'강드쉬' IMF 총재는 작년 4월 20일 동남아 중앙은행총재단 회의에서 한국경제가 위기를 벗어났다고 진단하면서 새로운 고품위 성



장(Higher Quality Growth)을 제안하였다.

무엇이 고품위 성장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기업들까지 휩쓸린 부도의 연쇄적인 여파 속에서 바닥으로 갈아 앉은 소비수요로 인한 시장 위축, 200여만명에 육박하는 실업자의 발생 등은 지난 30여년간 불황을 모르고 내달려온 사회전분야에서 심각한 반성을 불러 일으켰다.

첫째, 경제외적인 이유나 논리에 의해서 경제가 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제현상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흥하면 쇠하고, 쇠하면 흥하는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발전하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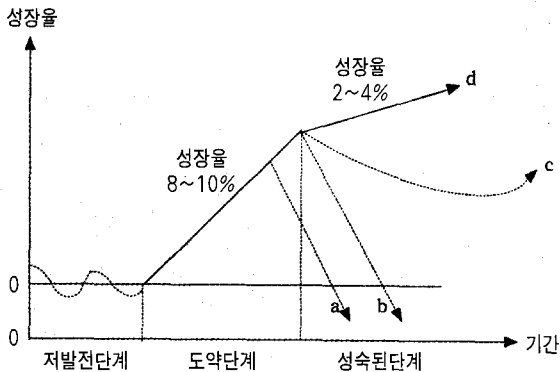
그러나 경제가 쇠하는 과정에 들어서게 되면 국민의 불만이 증폭하게 되므로 정치권은 이를 두려워해서 정책의 힘으로 이에 개입하게 된다.

정책이 시장에 개입하여 경제의 흐름을 바꾸게 되면 당장의 불황을 모면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경제의 구조적인 결함을 개선할 기회를 잃게 되고, 모든 경제주체도 호황(好況)심리에 빠져들게 되어 과소비와 부도덕 등으로 대표되는 소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지게 된다.

도덕적 해이란 무엇인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불조심에 무관심해진다. 마찬가지로 해만 가면 월급 오르고, 일단 입사만 하면 평생 고용이 보장되는데 국민들이 애써 일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일에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저기에 떡값을 뿌리면서 상호지급보증 등의 편법을 사용하여 빚으로 몸통만 일단 키워 놓으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기업문화 속에서는 기업들이 재무구조개선과 경쟁력향상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

〈그림 1〉 경제발전의 단계



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모든 경제주체들의 경제하려는 의지(Will to Economy)의 상실과 특히 재벌기업과 금융기관의 대마불사(大馬不死)심리 등이 '도덕적해이'의 상징인 것이다.

둘째, 경제의 자생력이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국의 경제는 저발전단계 → 도약단계 → 성숙된 단계 등 세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게 된다.(그림1)

수많은 후진국들은 저발전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어떤 시점에 이르면 도약단계에 이르게 된다. 일정한 도약단계를 거쳐서 안정적인 성장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성숙된 선진국 경제의 모습을 보이면서 안정적인 발전을 보이게 된다.

우리나라는 6.25동란 이후 5.16군사혁명에 이르기까지 소득 10불 정도의 최빈국 수준에 머물러왔다.

'60년대 이후 우리사회는 "5천년 묵은 가난 5년 만에 벗어보자."라는 구호아래 강력한 정부주도적인 경제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지난 30여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0%대로서 한국인의 "하면 된다(Will do Spirit)"정신을 전세계가 찬탄할 정도로 그야말로 비행기가 솟구쳐 오르는(Take off) 도약단계를 경험하였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의 도약단

계를 거치면서 보통 세가지유형의 성장흐름을 경험하게 된다.

첫번째 경험은 도약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예전의 저발전단계로 도로 추락하는 경우로써,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제국의 경험이나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나라 그리고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경험으로 대표된다.(그림의 a)

두번째 경험은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경우로써 아예 저발전단계로 회귀하든지(그림의 b 경우), 구조조정을 통하여 추락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다시 발전단계로 방향을 고쳐잡든지(그림의 c 경우)하는 경우로써, 한국과 멕시코 등의 경험으로 대표된다.

세번째 경험은 성공한 선진국의 경우로써 도약단계에서 무사히 방향을 조정하여 성숙단계로 정착륙(Soft-Landing)하는데 성공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는 성숙된 선진경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도약단계를 거치는 동안 우리경제에 축적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착륙에 실패함으로써 경제가 다시 추락하는 아픈 경험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추락의 방향을 고쳐잡아 다시 성장궤도로 진입하면서 무사히 성숙된 경제로 진입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끝없는 낙락의 길로 추락하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를 일이다. 단지 전체국민과 기업등 경제주체들의 인식과 노력을 우리경제의 자생력 강화에 어떻게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이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셋째, 정부주도적인 성장기조하에서 체질화된 고비용·저효율구조를 창조적으로 파괴하여 공정한 경쟁분위기를 만들어야한다.

무엇이 옥일승천(旭日昇天)하는 기세로 선진국 경제를 지향하면서 내달려왔던 우리 경제를 추락하게 했는가? 그것은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면서 지나친 시장간섭을 통하여 경제의 흐름을 왜곡(歪曲)시켜 왔기 때문이다.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겪으면서 발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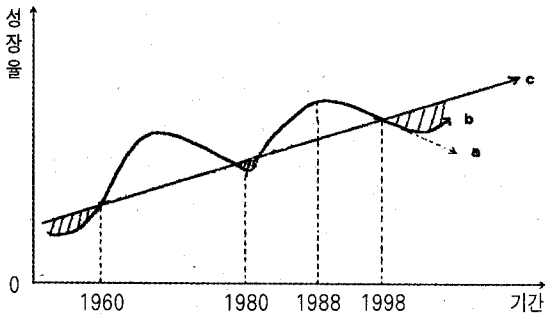
가장 안타까운 일은 나라 경영이 잘못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은행의 엄청난 부실채권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여태까지 지원한 재정은 64조원 규모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라 한다.

한 해 재정의 75%를 부실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투입하고 있다. 그것도 오늘 세대들이 전부 부담하는 돈이 아니라 절반 이상을 채권발행을 통해서 조성한 돈이다.

내일의 세대들이 갚아야 하는 모든 부실경영의 뒷처리는 모두 국민들이 감당해야한다는 결론이다.

〈그림 2〉 한국경제의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경기순환



는 사실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다. 그 주기는 나라에 따라서 빠르면 2~3년 주기일 수도 있고 7~8년 주기일 수도 있다.

경제가 불황에 처하게 되면 경쟁력 없는 경제주체는 시장에서 도태되고 새로운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을 이룩한 경쟁력 있는 경제주체들이 남아서 다시 경제를 호황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소비자들도 과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통하여 이에 협력하고 동참하게 된다. 경제의 흐름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책이 여기에 개입하여 흐름을 왜곡시키면 불황기간은 단축될 수도 있을 터이지만 마땅히 퇴출되고 정리되어야 할 모든 고비용·저효율의 개혁기회를 잃게 된다.

이에 따라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마저 만연되어서 불황에 대한 경제 스스로의 대응잠재력마저 약화되어 거의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시장기구의 조정작용에 의해서 호미로 조금씩 대응할 일을 가래를 들고 나라전체가 나서야 죽어가는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지경으로까지의 위기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경제는 평균성장률(그림의 c)을 기준으로 하여 호황과 불황(빚금부분)을 겪으면서 발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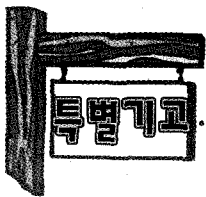
불황기가 되면 경제의 저효율과 고비용을 초래해왔던 모든 적폐(積弊)가 정리되므로 다시 경제는 호황으로 돌아서게 된다.

그러나 호황상태가 지속되면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해져서 다시 불황상태로 경제는 반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가 보다 높은 상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황상태를 겪지 않으면 안된다.

불황시에 경제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슈페터(Schumpeter)와 같은 경제학자는 불황기를 '창조적인 파괴'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불황기를 모르고 지난 20여년간을 내달려 왔다. 그러나 지속되었던 호황기 속에서도 불황의 그림자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90년 초반 경기가 식어가자 당황한 정부는 주택 200만채 건설과 같은 경기진작 처방으로 이를 넘겼다. 구조조정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문민정부 수립 이후 새정부의 강력한 개혁분위가 산업부분으로 불똥이 튀자 다시 불경기의 조짐이 일게 되었고 이에대한 사회적인 저항을 수용하여 개혁은 유보되고 경제는 호황국면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시 경제의 구조조정기회를 놓



치게된 것이다.

결국 우리는 몇 차례의 구조조정기회를 정치논리에 밀려서 놓친 끝에 IMF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경제위기로 내몰리게된 것이다.

우리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여 다행히 (b)의 행로를 택하게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더 깊은 수렁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a)의 행로를 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 경제의 개혁작업의 진전에 달려 있다.

강드쉬 총재가 역설한 '고품위 성장'이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환경 속에서 시장경제원리가 지켜지는 성장을 일컫는다.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과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보다는 학연, 지연을 좇아 떡값을 잘 뿌리면서 남의 돈 잘 끌어오는 일에 열중하는 자가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보조와 은행융자, 나아가서 투자자의 출자금까지 방만하게 사용한 뒤 빚값은 일은 정부와 은행에게 떠 넘기는 무책임한 자들의 판은 이제는 깨야한다. '노력하는 자가 땀 흘린만큼 열매를 거두는' 농심(農心)의 풍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적당히 줄서고 뒷거래하면서 각종 혜택을 얻는 일에만 열중하는 경영풍토를 퇴출시켜야 한다. 나라경영보다는 개인적 이권이나 떡값챙기기에 더욱 열중해온 몰지각한 정치인들도 마땅히 퇴출시켜야

한다. 우리사회에 생산성이 낮고 비용이 높은 분야가 유지되고 있는 자체가 다른 경제분야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경제에 기생하면서 모든 부실과 부패를 저질러왔던 공짜인생(Free Rider)들을 퇴출시켜야만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환경이 조성되어 고품위 성장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나라 경영이 잘못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은행의 엄청난 부실채권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여태까지 지원한 재정은 64조원 규모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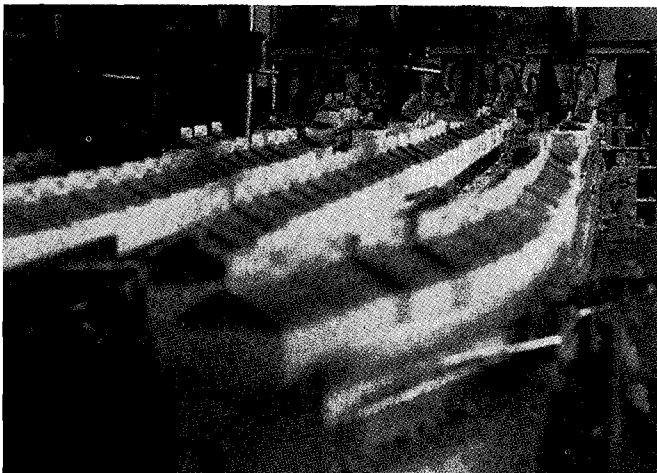
재정이란 국민들의 세금으로 형성된 돈이다. 한해 재정의 75%를 부실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투입하고 있다. 그것도 오늘 세대들이 전부 부담하는 돈이 아니라 절반 이상을 채권발행을 통해서 조성한 돈이다.

채권발행이란 내일의 세대들이 갚아야할 빚을 미리 끌어다 쓰는 행위이다. 이미 세수(稅收)부족 때문에 '98년도에 21조원, 그리고 '99년도에 23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정부이다. 적자예산 편성의 이유는 주로 실업구제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의 부자나라인 미국도 1968년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전비(戰費)부담 때문에 적자 예산을 편성한 이래 1998년에 이르기까지의 30년동안 재정 적자에 시달려왔다. 그만큼 적자재정편성은 관성을 가지고 국민경제에 위해를 가하게 된다.

'98년도 추경예산에서부터 시작되어 2년 연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적자재정편성도 그 관성 때문에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30여년 간의 고도경제성장 시대를 거치면서 방만하게 이루어져 왔던 모든 부실경영의 뒷처리 는 모두 국민들이 감당해야한다는 결론이다.

빛으로 이룩한 재벌들의 모래성도, 은행들의



약성부채도 모두 국민들이 갚아내야할 빚으로 남게 된 것이다. 방만하게 나라와 기업을 경영했던 결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경제주체가 없다.

관리부실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고 나서는 관료나 정치권의 모습도 없다. 단지 구차한 변명과 책임 떠넘기기의 추잡하고 구태의연한 작태만 있을 뿐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정부의 시장간섭을 줄이고 시장 속에서의 경쟁에 그대로 맡겨서 적자 생존의 치열한 경쟁에서 옥석(玉石)이 가려지게 하고, 능률이 낮은 분야는 시장에서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는 생각들이 크게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주도해야한다는 허황된 생각을 버리는 대신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부

족하거나 불충분한 시장을 열어주는 데 기여하는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도록 하면 충분하다는 인식도 크게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하여 효율을 높이는 경제체제가 확립될 때 비로서 품위 높은 성장체제가 갖추어진다.

모든 시장선택의 책임과 시장활동성과의 책임이 개별경제주체에게 철저히 귀속되어 살아남느냐 퇴출당하느냐가 결정될 때 경제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부실과 비리는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쟁논리에 입각한 경제구조개혁”이 IMF위기를 극복하는 길로 선택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다음호에 계속〉

〈필자연락처 : 0431-261-2593〉

# 대 신 무 역

## 국내 최초 알팔파 헤일레지 본격출하

\* 원산지 : 중국

\* 성 분 : 조단백질 6.96, 조지방 1.21, 조섬유 15.04

위 성분검사는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검사한 것이며 본 헤일레지는 중국 연변 조선족동포가족 여러분들이 연구의 연구끝에 진공포장하여 가축사료용으로 적합하게 생산된 제품입니다.

낙농사장님의 넓고 넓은 마음으로 중국동포를 마음적으로나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야 문의

▪ 판매소 인천 TEL : (032)819-5677~8, (032)442-3000

H.P : 011-332-1599 대신무역 대표 백창수